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 불법체류 해외탈북자 동향과 보호대책
발제자 :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일 시 : 2016년 3월 24일 오전 7시 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214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약 >

☞ 3월 24일 정책세미나에서는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님을 연사로 최근 불법체류 해외탈북자 동향과 보호대책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2.16 국회연설에서 북한 '레짐 체인지'를 거론했다. 이는 기존의 대북정책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그 동안의 대북정책의 프레임을 갠으로써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할 관련 부처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발효된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안 2270호와 여러 국가의 독자적인 제재안으로 인해 북한에서는 대량 아사자가 발생했던 1990년대 중반과 같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 할 것이라는 소문이 횡행한다. 이럴 경우 또 다시 대량탈북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탈북자는 북한체제의 고발자이자 인권침해의 산 증인이다. 탈북자들은 국내 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보호를 요청할 경우 헌법에 따라 자국민으로 대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중국은 북중 우호관계를 내세워 탈북자를 강제북송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차선택은 탈북자에 대한 국제법상 난민

의 지위를 인정받도록 하는 일이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차선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독일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 어느 국가도 독일의 통일을 바라지 않았지만, 독일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며 탈북자들을 다른 나라로 넘기지 않았고, 탈북자를 수용했던 나라들에게 배상을 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독일의 통일을 만들었다. 결국 통일을 위해선 우리 정부가 변해야 한다. 전 세계를 향해 우리가 모든 탈북자들을 수용한다고 천명해야 한다. 또 그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탈북자를 조용한 외교라 쉬쉬하지 않고, 북한을 떠난 모든 탈북자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 중국은 1982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1951)'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에 가입했다. 중국은 난민조약상 난민의 자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왔다. 베트남 난민이나 태국의 난민들의 경우 유엔과 협조해 온 것과도 상반된 행동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슈화시켜 중국을 압박한다면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얻어 남한이든 제3국이든 갈 수 있을 것이다.

■ 북한-라오스 탈북자 송환 협정은 우리 외교 정책 실패

: 탈북자 인식과 지원 정착에 새로운 변화가 없는 한 통일 희망도 물거품

- 2012년 중국 정부가 탈북자 30명 강제북송 했던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그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이전만 못하고 정부 역시 눈을 감고 있다. 언론도 2013년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 북송 사건 보도 이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이 북한과의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나왔다.

- 북한은 지난 2월과 3월, 러시아와 라오스 당국과 [탈북자 송환에 관한 협정]을 잇따라 체결했다. 특히 라오스는 우리나라로부터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원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협정을 맺었다. 우리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국민들의 실망이 컸다.

- 독일의 언론사 taz, Die Welt 등은 탈북자의 남한정착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언론들은 무관심한 상태다. 탈북자에 대한 역할론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탈북자 인식과 지원 정착에 새로운 변화가 없는 한 통일의 희망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 2016년 1월 7일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9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강행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이어 2월 16일 국회 연설에서 '레짐 체인지'를 거론했다. 이는 기존의 대북정책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 18년 동안 대북 평화정책의 프레임을 갠 지도자가 없었다.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한 5.24대북조치만을 취했지 대북 평화정책을 깨진 않았었다. 이번 박 대통령 연설로 인해 그 동안의 프레임이 깨졌고 이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할 관련 부처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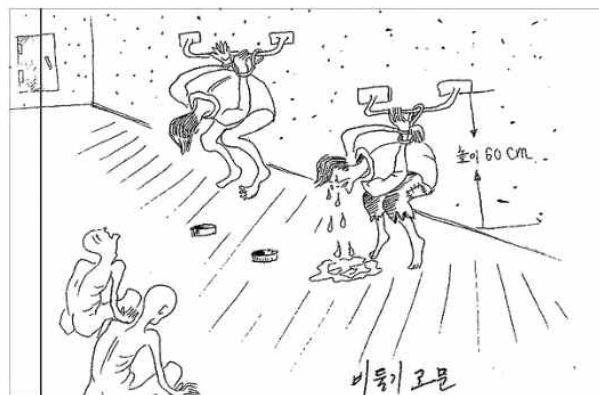
■ 탈북자는 북한체제의 고발자이자 인권침해의 산 증인

: 제3국 체류 탈북자 방치하면서 통일 이야기하는 건 모순

- 국내 정착 탈북민은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북한을 떠나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 탈북자는 여러 장애요인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중국에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은신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약 10~20만 명 규모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발효된 유엔의 대북제재안 2270호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여러 나라에서 독자적인 제재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강력한 제재안이 발효될 경우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할 것이라는 소문이 횡행한다. 이럴 경우 또 다시 대량탈북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탈북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탈북자는 북한체제의 고발자이자 인권침해의 산 증인이다. 북한은 철저한 성분사회로 성분이 불순한 자들은 출세는커녕 세 끼 밥도 챙기기 어렵다. 하지만 김정은 일가는 3대 세습에다 초호화 삶을 즐긴다. 탈북자들은 이런 북한의 이중성을 고발해왔다. 우리 정부도 못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엔 20만여 명의 주민들이 수용되어 있다. 그들의 인권침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고문, 구타, 성폭력, 강제노역 등이 일상적이며 수시로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있다. 또 중국에서 방황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두 발 달린 짐승’, ‘잊혀진 동물’로 불린다. 특히 여성 탈북자들은 인신매매범의 타깃이 된다. 때문에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중국남성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수용소의 인원들이 기아 상태인 것을 보여준다(왼쪽), 비둘기 고문이라 불리는 고문의 형태이다(오른쪽)]

- 탈북자들은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은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임을 말해준다. 하지만 북한도 UN 회원국으로 주권 국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 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떠나 난민임을 주장하고 대한민국에 보호를 요청할 경우 헌법에 따라 자국민으로 대우하는 것은 당연하다.
- 문제는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들이다. 이들은 탈북여성의 신분 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국적자로 남는다. 그들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북한이탈주민법이 중국에서 출생한 탈북 아동들과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들은 탈북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나라가 제3국에 체류하는 자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하면서 통일 이야기를 할 수 없다.
- 중국에 10만 명 이상의 탈북자가 은신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중국은 북중 우호관계를 내세워 탈북자를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강제송환을 감행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차선택은 탈북자에 대한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도록 하는 일이다. 탈북자를 자국민으로 내세우면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지만,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차선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정부, 전 세계를 향해 우리가 모든 탈북자들을 수용한다고 천명해야 : 탈북자에 대해 관련부처의 자국민 보호조치, 난민 지위 부여 노력 필요

- 1970년, 80년대는 남북이 경쟁했던 시기로 1983년 미그 19기를 몰고 남한에 귀순했던 이용평 대위와 같은 초기 탈북은 체제 선전에 활용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러시아 북한 벌목공들의 탈출이 주종을 이뤘고, 우리사회에 탈북의 존재가 알려지고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였다. 1990년대까지 탈북이 개인적인 일이었다면 2000년대부터는 시민단체나 인권단체가 기획을 해서 데려오는 소위 기획탈북이 주를 이뤘다. 주요 탈출루트는 국제기구나 해외공관을 통해서였다. 기획탈북이 본격화한 것은 2001년 김수네 가족 7인의 사건부터였다. 2002년에는 탈북자들이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이나 학교에 진입해 국내에 입국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았다.
- 하지만 이후 중국 보안당국의 국제기구와 해외공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고, 한국 정부의 탈북자정책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조용한 외교를 취함에 따라 기획탈북은 어려워졌다. 이때 브로커 집단이 등장한다. 돈만 주면 탈북부터 한국 입국까지 모든 과정을 해결해 주었으며 이로 인해 탈북의 시장화가 되었다.
- 독일의 경우 과거 분단시기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약 400만 명이 넘어왔다. 동독 건국 이후 매년 20만 명씩 서독으로 넘어온 셈이다. 독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혈통주의이다. 서독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탈출자들을 계속 받아들였고 자국민으로 보호했다. 또 서독은 동독의 탈출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헝가리와 외교전을 펼쳐 국경 개방 조치를 시행했다. 아래 왼쪽 사진은 기적의 버스라 불리며 동독 정치범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이고, 가운데 사진은 탈출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체코 프라하의 현장이며, 오른쪽 사진은

오스트리아 외무상 알로이스 목과 헝가리 외무상 기울라 호른이 헝가리 국경을 개방하는 모습이다. 이 사진들은 탈출자들을 위한 서독 정부의 노력의 상징이다.



- 독일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 승전국에 의해 분단되었고 어느 국가도 독일의 통일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며 탈출자들을 다른 나라로 넘기지 않았고, 탈출자들을 수용했던 나라들에게 배상을 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독일의 통일을 만들었다.
- 결국 통일을 위해선 우리 정부가 변해야 한다. 통일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방관해선 안 된다. 전 세계를 향해 우리가 모든 탈북자들을 수용한다고 천명해야 한다. 또 그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의 소극적인 자세에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탈북자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되묻는 실정이다. 탈북자를 조용한 외교라 쉬쉬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을 떠난 모든 탈북자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탈주민법’을 고쳐야 한다. 무국적 탈북 아동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 중국은 1982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1951)’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에 가입했다. 동 의정서에 대한민국도 1992년 가입했다. 중국은 난민조약상 난민의 자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왔다. 베트남 난민이나 태국의 난민들의 경우 유엔과 협조해 온 것과는 상반된 행동이다. 탈북문제는 인권 문제이고 국제적 이슈이기 때문에 중국이 강제북송을 무조건 할 수 없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슈화시켜 중국을 압박한다면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얻어 남한이든 제3국이든 갈 수 있을 것이다.
- ‘레짐 체인지’를 언급했던 박 대통령의 2.16선언에 따라 탈북자 정책에도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새로운 탈북자 정책의 핵심은 ▲정부 관련부처의 자국민 보호 조치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제4차 핵실험 이후 유엔과 한국,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대북제재로 ‘제2 고난의 행군’ 가능성과 함께 대량 탈북자들의 속출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도기적 탈북자 보호대책은 물론 통일을 염두에 두고 탈북자 보호시설에 대한 사전 대책을 비롯한 탈북자 보호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214회 정책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탈북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적응하고 동화 될 수 있을까? 또 정치적 가치관과 체제 수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가?

답변 자연과학은 이론을 놓고 실험을 하지만 인문사회과학분야는 역사에서 답을 찾는다. 독일의 통일을 보면 서독의 시스템이 확고하고, 사회가 건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었다. 우리 사회에 걱정되는 것은 아직 법치주의가 제대로 뿌리 박혀 있지 않고, 준법정신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 생각된다. 탈북자들은 적응력이 뛰어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사선을 넘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넘어섰는데 시스템에 적응 못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바로 적응을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나온 통일 이야기는 안 좋은 말들이 많다. 통일에 대해 어려움을 나열하기보다 좋은 점을 나열하는 것이 좋다. 통일은 결혼과 비슷하다. 걱정 때문에 결혼을 미루기 보다는 결혼하고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것을 독일을 통해 볼 수 있다. 독일은 우리보다 어려운 통일을 했다. 우리나라는 그들의 좋은 선례를 따라가면 된다.

질문2 북한 탈북자와 동독 탈출자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답변 독일의 경우 전쟁에 의한 분열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의해 분열되었기 때문에 서로 평화롭게 이동이 가능했다. 초기에는 자유롭게 이동 가능했으나 나중에 서독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져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였다.

질문3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신청 대행이 필요하다고도 했는데 그 이유는?

답변 난민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북한과 가깝기 때문이다. 중국은 탈북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기보다 북한의 편을 들어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탈북자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 때문에 차선택으로 난민신청서 대행을 맡아서 한다. 난민지위라도 부여한다면 그들이 북으로 송환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으며 제3국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4 동독 탈출자들을 위해 NGO나 종교단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독일통일에 서독에 기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동독의 정치범 석방에 가장 기여한 것은 교회였다. 정치범 석방에 대해서 동독 정부와 서독 정부에서 합의를 했지만 동독에서 잘 해주지 않으려 했다. 교회의 주도하에 동독에 있는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데려왔다.

서독 사람들의 역할이 컸다. 서독과 동독 사이에 자유로운 왕래가 있었으며 서독 사람들이 동독으로 넘어가 그들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돈을 건네주었다. 이 쌈짓돈이 동독 사람들로 하여금 서독이 동독보다 잘 산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동독 사람들은 서독의 마르크화를 선호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화폐통합이 나왔다. 결국 서독

사람들의 싹짓돈이 통일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셈이다. 우리도 국내에 있는 탈북자가 고향에 있는 부모에게 송금하는 것이 좀 더 영향력을 가지면 이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